



기업도 CFE(CF100) 필요성에 공감,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제도 구체화 계획

〈보도 주요내용〉

6.7.(수) 경향신문 「‘RE100보다 달성 더 어려워’ ... 정부 ‘CF100’에 기업들 냉랭」 등에서 전경련의 「CF100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해 CF100에 대한 기업 인식 수준과 참여 의향이 낮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다수의 기업이 CF100 필요성을 인식(69.6%)하면서도 참여 의향이 저조(17.6%)하게 나타난 것은 CFE 제도 논의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인식 수준을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CFE 제도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제연합(UN)과 구글이 검토하고 있는 ‘24/7 CFE(무탄소 에너지 실시간 공급)’의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며, 기업 입장에서 실현 가능하면서도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파리기후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 재생에너지 사용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전, 수소 등 모든 무탄소 전원을 각국 사정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CFE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240)
	산업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강희경	(044-203-4249)